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2012년 12월 13일 (화) 국제세미나 보도자료

(엠바고: 2012년 12월14일(수)조건)

내용문의 : 장석인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3299-3249, 010-7130-3469)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 산업연구원(원장: 송병준)은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2시-6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으로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Rethinking Industrial Policy in the Era of Global Socio-Economic Restructuring)”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

* 상세한 세미나 프로그램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 등은 <별첨자료 1> 세미나 개최계획 참조

□ 원장 개회사 요지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재정 위기 등 선진국으로부터 유발된 경제불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
- 이에 각국 정부는 경제부문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개편 과정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시도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국에서조차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

- 우리 한국은 최근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지만 현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
 - 대외적으로는 선진국과 중국·신흥국 사이의 Nut Cracker 상황을 돌파하고, 다시 그려지고 있는 산업별 세계경제지형의 고지 선점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모색 필요
 - 대내적으로는 경제구조의 성숙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비함으로써 고용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낮은 생산성 제고노력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복지체계 정립은 물론 녹색 성장과 신성장동력,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산업정책 발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금년 개원 35주년을 맞는 산업연구원은 향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을 적기에 제시할 계획

□ 세션별 발표내용 요약 및 토론요지

제1세션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망 -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and its New Framework

주제발표: 산업정책의 새로운 관점과 전망

(Perspectives on the New Industrial Policy)

(Dani Rodrik 하버드대 교수)

- 한국의 경제성장은 혁신을 도입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지속한 결과
- 한국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성장을 기반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의 수행 등을 통해 경제성장 고도화 달성이 가능하였음
 -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
 - 구조적 변화의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신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 등을 통해 시장실패의 요인들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
- 경제성장 견인에 있어 핵심적인 산업정책의 형태는 (i)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저평가된 통화정책, (ii) 개발금융, 신용보조 및 저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정책, (iii) 기타 목표지향적인

산업정책임.

-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친 한국은 향후에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수행이 긴급요

-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의 수행이 필요

□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전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

- 산업정책의 수립이전에 외부효과, 시장실패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의 제약요인 등의 존재여부와 위치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사회 내 전반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어야 함.

- 기업들은 정부와 “게임”을 할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 항상 부패와 제대추구(rent seeking)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 산업정책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전체가 되어야 함.

□ 산업정책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장치의 구상 원칙

- (‘정부와 민간과의 연계망안의 내재’의 원칙)주요한 시장실패의 요인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정부 사이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형성과 조정능력을 강화할 필요

- 이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생산자 포럼, 검색 네트워크, 투자자문협의회, 업계간담회, 민간-공공 벤처 펀드 등의 형태

로 나타날 수 있음

- ('당근과 채찍'의 원칙) 산업정책의 성공은 "승자의 선택"이 아닌 "패자를 찾아내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최적의 정책결과도 반드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의 실험적인 시도는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축소 혹은 중단 등의 사후 대책 수행이 필요
- (책임성의 원칙)"관료가 기업을 감시하면, 관료는 누가 감시하는가?"의 답으로서, 산업정책의 수행에 따른 책임과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의 요청사항과 정책수행 내역, 지출회계 등을 공개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이 필요
- 산업정책은 단순한 정책도구의 실행보다는 "발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
- 세제혜택, R&D 보조금, 신용 인센티브 등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보다 어느 분야에서 시장실패로 이끄는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
-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어느 정도 투자하고자 하는지 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향을 확인하고 이를 유인하는 작업이 중요

패널토론 1
로버트 헌터 웨이드(런던 정경대학교 교수)

- 로드리크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디자인을 강조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 수단의 중요성은 덜 생각하지만, 리카도 하우스만과 같은 연구자들은 한 국가 내에서의 현재 또는 미래 생산의 혼합을 강조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 왔음.
- 이러한 연구들이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는 정부들에게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 세계은행의 저스틴 린은 한 경제의 비교우위의 제한안에서 생산의 다양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것이 비교우위 안팎에 있는가에 대한 구별은 설명하지 않는데, 로드리크 교수는 이러한 비교우위 논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함.
- 로드리크 교수는 잘 정립된 제도적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 산업정책의 경우를 설정하였지만 린이 3년간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로 지낸 오늘날에도 세계은행에서 “산업정책”이란 문구는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로만 남아 있음.
- 2010년 세계은행 경제학자들과 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10% 미만의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린의 산업정책 견해에 동의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개별국의 정책 및 제도를 평가(CPIA)하는 방식이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비판자들이 가격 왜곡의 이유를 들어 어떠한 정책을 거부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의 발언의 문제만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다른 부분에 의한 정밀조사로부터 감춰진 하나의 부분은 산업정책의 제한된 형태를 개척하는 것임.
- 본인의 발표에서는 로드릭 교수의 발표를 상이한 타입의 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임.
 - 하나는 동아시아와 같은 중앙집권적 형태이며, 또 하나로 분권화된 형태임.
- 특히, 분권화된 정책은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 및 교육의 공유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는 벤처자본가,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분권화된 정책은 비록 뚜렷이 드러나진 않지만 미국에서 잘 발전되어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시장근본주의자들의 관심 밖에 있음.

패널토론 2

자크 사피르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교수)

- 데니 로드릭 교수의 발표는 비주류 경제학자들에 있어서는 널리 동의되고 있는 몇몇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산업정책의 필요성은 빈번하게 논의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잘못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의할 만한 몇몇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 등의 요인에 의해 지연됨.

- 적정 수준의 금융통제, 자국통화의 저평가 기초, 건전한 산업 정책의 기본인 몇몇 종류의 구조적 정책들 간의 적절한 조합이 요구됨.
 - 실제로 “승자를 뽑는(picking winners)”식의 정책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때때로 “당근과 채찍”도 동반한 정책의 정착이 필요함.
 - 산업정책 수립 전략의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시장과 정부실패간의 균형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미시, 거시적 정책의 종합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함.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조율하는 데는 “상황” 및 “부존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 발표논문의 참고자료들은 변화하는 이론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적인 의사결정 이론에만 기반하고 있음.
 - 이를 반증하는 논문과 과학적 실험들이 꽤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문헌들은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 간 비교는 추상적인 정책 내용의 비교가 아닌 유사성과 이질성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또한 부존자원도 산업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표준적인 의사결정 이론에 따른 개인주의적 방법론은 문제가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개별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러한 형이상학적 고려들을 통해 개별경제주체 및 정책 당국간의 보다 복합적인 작용 및 효과를 관측할 수 있을 것임.

□ 모든 성공적 산업정책은 산업정책 그 이상이다.

-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역사적 사례는 단순히 민간과 정부부문간의 관계뿐만 아닌 미시, 거시적 수준 모두에 기반을 둔 경제 제도들의 복잡한 조합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제도들은 동시에 정치적인 결정의 토대를 마련해 주며, 산업정책이 거시경제적 수준까지 속속들이 전파되는 것을 가능케 해 줄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방어적인 환율정책의 운용, 금융기관 등) 미시 경제적 수준에서 관련기관들의 생산적 방향으로의 구조적 개혁을 유발하기도 함.

- 이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의 창설, 지원, 발전 등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효과의 시너지 제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자기충족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비효율적 상황(예를 들면 가격 보조)이 연출되기도 함.

패널토론 3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 로드리고 교수 산업정책 개념의 한국경제 적합성과 활용가능성
 - 로드리고 교수는 기존 학자들과는 달리 산업정책의 개념이 “반적으로 생산 활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조정정책”으로 정의되어야하고, 그 목적이 “자원의 낭비와 지대추구 형상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2007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새로운 여건 하에서 한국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의 관점에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산업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 기존 산업(제조업과 서비스 모두 포함)의 고부가가치화(일종의 전문화),
 - 기존 산업의 IT 등 여타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융합화, 녹색화 등 (일종의 다각화)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차원의 미래 유망분야 (3개 분야 17대 분야)의 기술, 인력, 인프라 구축
 - 이 세 가지 방향의 산업발전에 있어 정부 개입은 모두에서 현재보다 부가가치가 높거나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의 자원과 인력(주로 R&D투자를 통해)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의 개입임.

○ 따라서 로드리크 교수의 오늘 산업정책 논의와 여타 다른 논문과 저서(One Economics Many Recipes)에서 역설하고 있는 구체적인 산업정책 설계의 원칙과 실현단계의 유의사항, 오늘 강조하신 효과적인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요건에 관한 논의는 우리경제의 미래 산업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기반구축에 크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로드리크 교수의 효과적인 산업정책 추진 제도요건의 한국 적용

○ 로드리크 교수의 산업정책 논의를 한국의 산업정책,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차원의 유망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의 정책추진에 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가 "승자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패자를 찾아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

- 산업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실행보다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데 따른 정보와 비용의 '발견의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세제혜택, R&D 보조금, 신용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보다는

- (1) 어느 분야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

- (2)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자 하는지 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향을 확인하고 이를 유인하는 작업이 중요

-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현행 신성장동력 정책에 있어서 유망분야에 대한 정부 R&D예산 확대,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제공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과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 또한 유망분야의 발굴과 선정, 발전전략 발표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내기업의 해당분야에 대한 투자의향과 후속 양산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미래 신성장유망분야 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 신산업의 등장과 발전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산업생태계 활성화차원의 정책과제 개발 및 제도개선이 긴요
- 최근 거론되는 신성장동력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특정 부품·장비·시스템으로 승부가 가려지기보다는 단말기·시스템·서비스 간 연계 또는 부품소재·장비·시스템·서비스 간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비록 개별적으로는 성공하더라도 곧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기 쉬운 품목과 서비스들로 구성된 특성을 지님.

- 따라서 향후 신성장동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특정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관련 소재부품에서부터 보완재, 관련 인프라와 규제, 법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생태계적 접근이 필요
- 또한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조성은 우수한 기술력과 공급능력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국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과 협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용자와 수요기업, 공급기업과 해외소재 기업의 니즈와 가치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
- 일반적으로 산업생태계내 기업은 효율성, 효과성, 지속적인 혁신의 토대 위에서의 경쟁에 초점을 두며 진보하지만 해당산업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대기업들은 생태계내 다양한 기업들의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그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혁신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또한 생태계관점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와 결합된 소비자와 사용자의 가치와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혁신(complementary innovations)이 있어야 함.
 - 따라서 생태계내에서 이러한 보완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전체 시스템에서 필요한 경영자원 모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도기업은 관련기업(company line)과의 공생적 발전이 중요
 - 실제 고객의 니즈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

여기업(contributors)들의 참여가 필수적

- 특히 생태계내 기업들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공진화를 위해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해야 하며, 그 결과로 연구·개발 투자도 상호 부양효과가 있고 시너지효과가 발현되도록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또한 규제당국과 정부는 기존의 법·제도가 이러한 산업생태계적 관점의 산업발전 여건조성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있는 산업생태계의 본질, 발전단계와 구조적 특성, 경제적 성과와 발전 제약요인 등을 진단·평가하고 법·제도상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는 사회적 여건과 비즈니스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패널토론 4

김준동(지식경제부 산업정책정책관)

□ 최근 산업정책 여건 변화의 핵심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야함.

- 지금까지가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100 미터 개인경주였다면 지금부터 우리 앞에 놓인 종목은 구기 종목
-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야 하며 산업정책도 마찬가지

□ 최근 한국 산업의 발전여건 진단

- 향후 한국산업의 지속성장에 필수적 요소인 '돈, 사람, 기술'이라는 필수 자양분 플랫폼도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경우 미국의 나스닥 다음으로 글로벌 성공사례인 코스닥이 신산업분야의 투자자금 공급원으로 잘 작동
 - 앞으로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비중을 줄이고 회사채의 비중을 늘리는 문제, 회사채 중 중소기업채권의 유동성 제고 문제, 해소, 기술금융에서 모태펀드를 비롯하여 정부자금의 비중을 완화 등이 과제
 -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라는 대학진학율을 보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하나 문제는 중소기업에 인력이 가지 않는다는 것
(이에 정부는 전국 700개 이상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통해 양질의 고졸인력을 산업현장으로 공급할 계획)
 - 산업간 인력부족 문제와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문제부족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동태적인 수급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해결
 - R&D문제는 정부에서 어느 분야 못지않게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으로 GDP대비 R&D비율이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며 정부에서는 R&D예산을 매년 10% 이상씩 꾸준히 증가

- 향후 문제는 산업이라는 내용물의 조합과 방향성으로 앞으로 소득 3만 불과 무역 2조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긴요

□ 향후 한국 산업정책의 6대 과제

- 향후 한국 산업정책 과제의 핵심은 현재의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 균형을 다시 잡아가는 문제로 귀결
- 첫째, 먼저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위해 내수의 상대적 비중확대를 장기 산업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함.
 - 중요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과 내수는 상호 확장이 되어야 하지만 무역이 국내산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무역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국내고용이 발생되지 않아 국가경제전체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 예상
 - 앞으로 국민경제에서 내수의 상대적 비중을 여하히 키우느냐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산업의 발전의 초석
- 둘째, 산업부문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조업으로부터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창출에 주력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은 고용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에서 각종규제로 인해 서비스업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임금격차도 문제인 실정

-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독일,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에 있지만 제조업에서 파생되거나 진화되는 서비스업의 경우 아직 초보적인 수준
 - 첨단 금융상품을 이용해 제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파는 대신 리스 등을 통해 소모용품과 유지보수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제조업으로부터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창출에 주력할 필요하고 가능
- 셋째, B2B 산업과 B2C산업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첨단 핵심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공통점은 B2C보다 B2B가 강하다는 점임)
- 우리나라는 첨단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 등으로부터의 첨단 부품소재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 (삼성의 갤럭시 폰도 부가가치기준으로 50% 이상이 해외로부터 수입)
 - 이 경우 부품소재분야의 공급사슬이 심화되고 정교화 될수록 완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더불어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강해져 무역이 국가성장과 부의 균형적인 배분에 기여 가능
 - 정부는 2001년에 부품소재산업진흥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뿌리산업진흥 특별법을 제정하고 WPM(World Premium Material)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
- 넷째, 신성장산업과 전통산업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국가전체적으로 미래 신성장산업과 성숙산업 그리고 핵심 캐시 카우 산업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업Portfolio구성과 조화가 필요

- 신성장산업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시장참여와 벤처기업들의 왕성한 신규창업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기존의 대규모 기업들이 Main player로 시장의 최종포식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소위 '신산업투자의 역설' 현상도 발생
 - 정부는 200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3개 분야 17개 분야의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유지
- 다섯째,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문제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글로벌 Jobless growth 추세와 국내 소득의 양극화 문제, 여기에 더해 도요타 자동차 리콜이후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생태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주요 현안으로 등장
 - 정부는 동반성장의 문제를 '공생발전'이라는 생태계적인 관점으로 격상시켜 다루고 있으며 종래의 법적, 강제적인 해법에서 벗어나 합의와 사회적 압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문제해결에 주력
 - 최근 정부는 기업의 99%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 앞으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중견전문기업으로 많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산업에서 소위 Hidden champion들이

많이 생겨 산업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마지막으로 수출에 있어서 수출대상국들의 포트폴리오를 미래 지향적으로 지속적인 재편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
 - 물론 첨단제품을 통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미래 잠재시장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갈 필요
 - 현재도 이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수출비중이 70%를 넘고 있으나 앞으로 인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계속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 가는 노력이 필요
- 요약하면 향후 한국 산업정책은 산업발전의 미래지향적인 균형회복을 지향한 세부 정책추진이 필요

제 2세션

경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역할 - 중진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한계 -

The Role of New Industrial Policy in Avoiding Middle Income Trap

발표 1.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미국의 기업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R. H. Wade 교수)

- 산업정책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산업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최고의 산업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Gray Becker, 1985년), “정부는 모든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조건들을(즉, 효과적인 사회 기반시설, 숙련된 인력, 도시 계획 등) 제공해야 한다. ‘승자의 선택’을 위한 시도를(개인이든 기업이든 특정 부문 또는 제조업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 반면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목표와 결단력을 갖고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이 등장(한국, 대만 등)
- 따라서 산업정책에 대해 기존의 한정된 역할에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반영함으로써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집중화/분권화, 시장 선도/시장 추종, 높은 자원집중도/낮은 자원집중도 등의 기준으로 산업정책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산업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거나 산업정책을 비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중앙집중화된 산업정책만이 유일한 산업정책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 미국의 산업정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정책
- 미국의 산업정책은 시장경쟁의 유지,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확보, 공공재 공급 등 통상적인 정책목표와 달리 포괄적인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활용하고 있음.
 - 연방, 주, 지방 정부 등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을 포함하는 협력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R&D 정책을 수행
 - ‘시장실패’ 보다 ‘네트워크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들을 통해 기업, 벤처캐피탈, 공공 및 민간 연구소, 대학 등으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유도하되, 주요 지원분야는 기초연구와 기술사업화 분야임.
 - 예를 들면, 상이한 R&D 영역에 걸쳐 아이디어, 자원, 인력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기업들에 대해 자금지원을 함.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반도체기업 SEMATECH 지원사례)
 - 이렇게 분권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산업정책은 혁신도가 높고 급속한 기술변화와 강한 공급의존성을 갖는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보장될 수 있

음.

- 이 모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 및 서비스의 넓은 범위에 걸쳐 세계 지역으로 경제의 움직임을 촉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에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발표 2. 산업정책의 귀환: 최근 프랑스의 경험과 시사점 (J. Sapir 교수)

- 최근 프랑스정부는 1990년대 중반 공식적으로 포기했던 산업정책의 복귀를 단행
 - 19세기 이후 프랑스 산업정책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기업·사기업을 불문한 대기업들을 활용하는 정책(원자력에너지, 우주항공, 고속열차 등의 프로젝트)이 정당화되었으나, 1945년 이후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개발정책에 집중
 - 2005년 유럽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되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시라크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산업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
 - 이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탈산업화 추세 속에서 경쟁완화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감소와 잠재적인 사회불안이 가중되는 대내적 환경과 유럽연합의 경쟁규제, 유럽통화연맹(EMU)의 환율조정 불허, WTO와 EU의 무역장벽 불허 등 대외적 환경변화가 산업정책의 재도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2005년 초기 도입된 산업정책은 새로운 산업분야와 지역, 이론

과학과 응용연구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각 분야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 산업정책의 방향은 경쟁력 강화, R&D 역량 강화, 지역개발 등 세 부문으로 추진

- 그 결과 새로운 산업분야의 발전(바이오 및 신소재분야)을 야기하고, 이는 지역의 발전에의 연계효과도 발생하였음.

- 그러나 낮은 프로젝트 효율성, 보조금에의 의존성, 탈산업화 추세 제어 불능, 거시경제환경에 대한 민감도 증가 등의 문제점도 발생

- 최근 (2008-2009년)에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전략 산업 (Strategic Industry)' 추진전략으로 변모

- (i) 기술(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방과의 연계성 고려), (ii) 산업(산업발전 효과와 부가가치사슬상의 위치상 중요도 고려), (iii) 상업성(수익성 보장과 타 산업에의 영향 고려) 요소에 기반하여 '전략산업' 혹은 '전략분야'를 도출

- 녹색산업, 원자력, 자동차, 신소재 등 새로운 분야와 함께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강점분야였던 항공우주산업, 운송 등도 포함

- 정책수단은 지역단위에서는 중소기업, 그리고 국가단위에서는 대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및 예산배정, 저금리정책, 정부 보증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긴축재정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일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발표 3. 한국 산업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김인철 · 김원규 산업연구원)

□ 한국 산업정책의 변화

-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하여 기존의 교조적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의 실정에 맞는 산업정책을 개발 · 실행할 실제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
- 한국 산업정책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세계경제의 follower에서 leader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

□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

- 한국 경제와 산업은 일정 수준에 도달, 새로운 산업정책은 과거보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제약이 커질 전망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긴요
- 지식경제로 이행과 세계 산업에서의 리더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에서 실험적인 요소 불가피
-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개선으로 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환경 하에서 정책을 개발 ·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의 정립 필요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실물, 금융)의 협업 관계 확립 필요
-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기업가 양성 필요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부문의 질적 발전 필수적

토론 1. 이상호 (세종대학교 교수)

- 산업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re-industrialization" 성공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경제성장은 초창기부터 최소한의 “저임금”에 기반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시발되었으며, 이 후 국민들의 교육 열기가 높아지면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매우 빠르게 진척되어 왔고, 경제 성장과 함께 물적 자본 또한 빠르게 축적되면서 새로운 비교우위 원천으로 자리 잡음.
- 정부는 향후 효과적인 인프라제공, 전문인력 양성, 발전전략수립 등 전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적으로 향후 성장 전망이 높은 산업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수십 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기 위해 선도 분야를 신속하게 따라잡는 "fast-follower" 전략이 상당 기간 유효할 수 있음.
-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은 정책의 범위를 늘려 가는 쪽보다는

선택의 폭을 줄이고 선택을 집중하여 정책적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21세기 격화된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임.

- 산업정책의 효과가 급변하는 거시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훼손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산업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정부가 주도하여 바꾸기는 어려우며, 결국 기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과 같은 유연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토론 2. 이 근 (서울대 교수)

□ Post-catch-up 단계에서의 산업정책 방향

- 시장에서의 catch-up 전략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기술 선도국의 위치에 도달한 국가의 경우, 산업정책 수행시 첫째, 사후적으로 맞는 표준/기술 선택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둘째, 초기 시장 존재/창출의 리스크 등이 존재함.
 -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한국의 90년 중반 이후 진행된, 민관 공동 개발로 디지털 TV를 한 사례가 있으나, 그 후 실패사례는 전형적으로 위 두 가지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최적의 산업발전 전략이 First mover로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Fast follower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음.
 - 최근 한국 산업/기업은 끊임없이 선도자 (First mover)가 되

라고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한국에서 세계최초로 개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다 수 있음.(예를 들면, MP3 Player, 인터넷 전화, Iloveschool, 삼성미츠 등)

- 최종 소비재의 경우 선진국 시장에서도 First Mover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Fast Follower가 성공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디지털 TV사례처럼, 표준/트렌트에 대해선 Fast Follower를 하고, 제품 출시에 대해서 First or Second Mover로 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음.
- 이러한 산업발전전략을 따르는 경우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이 제품 및 기술개발에서 더 나아가 기술 표준 분야에의 적절한 개입 (동향 파악 연구 등) 등 정책적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실패사례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게 한 여건 즉, 보완적 자산이 결여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은 이런 부분에서 결여된 자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산업정책은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산업인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산업정책이 특정 기술/제품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서 그 효과가 불확실해지고 있음.

- 그 이유는 첫째, 기술의 프론트에서의 선별의 리스크, 둘째, 한국시장 협소로 표준 선도 곤란, 셋째, 세계화 하에서 지원 효과의 국외 누출, 넷째, 선진국에 근접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괴리된 생산능력보다 고용창출 중요성의 대두 등임.
-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이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생산력에서 고용으로, 생산자 보호에서 소비자 보호로 전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충족시키며, 인력 지원은 그 효과가 해외로 누출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한중 경제의 분업구도를 생각 할 때, 중국이 조립공정을 담당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연구개발, 마케팅, S/W 등의 분야로 집중하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토론 3.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학 교수)

- 개방과 성숙에 직면한 산업정책의 과제
- 산업정책은 특정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성장가능성이 더 크고, 이러한 특정산업 육성이 파급효과를 발휘해서 경제전체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때 정부에 의해서 정책수행이 이루어짐.
- 산업정책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점은 불균형성장을 통해 더 높은 성장률이 가능한 지의 여부보다는 정부가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음.

- 즉, 정부가 시장보다 고속성장부문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지, 정부가 이렇게 특정산업을 육성할 때에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
- 경제가 성숙하고 개방되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국가 경제가 미성숙하고 대외개방이 덜 되어 있을 때에는 정부의 역량에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이 많은데, 이는 다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고도성장가능 부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무역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특정부문을 육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성숙한 경제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프론티어를 개척해야 하며, 각종 이익집단이 발전한 상태에서 특정산업 육성에 따르는 이해관계의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며, 개방 경제하에서는 사용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개발 등의 과제에 직면하게 됨.
- 한국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수행을 통해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산업정책의 기본 목표를 얼마나 잘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한국정부가 그동안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17개 부문 신성장엔진 육성’, ‘고용창출’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실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이 필요함.
 - 바람직한 산업정책은 정부의 좋은 의도와 함께 낭비적인 자원 소모가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토론 4. 이 상진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국장)

□ Wade교수 발표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Wade교수의 '미국의 기업간 네트워크구축 관련 산업정책'은 신고전주의적 산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실패(network failure)를 보완하는 '소프트'한 산업정책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 정통적인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에 "soft" 한 산업정책과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산업정책"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서구 선진국의 정통적인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인 "Washington Consensus"는 확실한 재산권인정, 재정규율, 특정 부문에 쏠림이 없는 세제지원 및 보조금 정책, 금융산업자유화, 시장지향적 환율, 자유무역과 투자,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포괄
- 이에 반하여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은 특정 산업부문에 지원(진입규제, 보호관세, 보조금, 저리 융자, 자본통제, 공기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신고전주의적 산업정책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음.
- Wade교수는 미국의 경우 연방제구조, 입법, 사법, 행정 간 삼권분립으로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부문별 정책이 잘 작동하거나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조달시 혜택부여·기술 지원·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경쟁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soft"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론

- 특히, 죄수의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경쟁기업간에는 지식이나 노하우의 공유가 곤란하므로 정부가 상호학습, 생산성제고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일괄적인 지원(pooled resources support), 초기업 네트워크(supra-firm network) 구축에 NIH, DoD, ARPA, SBA 등이 관여
-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특정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 기업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측면이 그 동안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
- 특히, 초기업네트워크는 급속한 기술혁신, 휘발성이 높은 수요, 긴밀한 공급체인의존도가 높은 경우 외부효과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강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 Wade 교수의 발표내용은 상류(upstream)와 하류(downstream) 산업부문간의 조정실패가 일어날 경우, 정부가 하류 산업부문이 상류 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는 약속을 만들어 주는 mechanism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이 정당화 된다는 연구(Pack and Westphal, 1986 등)들과 연관
- 또한, Hausman and Rodrik(2003)도 생산원가는 생산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총요소생산성에 달려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매몰투자가 필요한데 생산에 관련된 정보의 확산은 이를 제공한 기업의 매몰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개별 회사 차원을 넘어 특정산업 전반에 유용한 생산기술, R&D, 인력양성에 대한 과소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

-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Noland and Pack, 2005)들이 한국의 초고속성장의 주요 요인이 산업정책이 아닌 자본과 인적자원의 축적의 결과라고 주장
 - Dwight Perkins(2011)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71~79, 82~89, 89~97, 98~2005년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경제성장이 자본과 인적자원의 축적(농업, 광업은 제외)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

- Wade교수의 발표에서는 향후 초기업네트워크가 실제로 이러한 변수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초기업네트워크 구축지원 산업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증거로 Internet의 발명과 연관 IT산업의 발전,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간 네트워크 내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의 파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
 - 그러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인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 기대

-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
 - 지방으로 분권화되고 삼권분립이 철저한 미국상황과는 달리 한국·대만 등 중앙집권적이고 상대적으로 엄밀한 권력분립이 강하지 않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업네트워크 구축지원 산업정책과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지
 - 연방제로 인한 철저한 지방분권과 삼권분립이 초기업네트워

크구축지원 산업정책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구조가 전제조건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아울러, 60년대 중반이후 한국이 급속한 산업적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기술인력 배출과 수출지상주의, 중화학공업육성등과 같은 정부의 비전제시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기존 산업정책의 틀에 어떻게 맞추어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Sapir교수의 발표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Sapir교수의 발표는 EU 프레임워크와 긴축예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자동차·항공기·신소재 등 전략적인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3가지의 클러스터별 특성(competitiveness pole, excellence pole, regional development pole)을 열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제약조건하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Sapir 교수가 제안하는 저리융자, 예산지원, 정부보증 등 전형적인 산업지원 유인책 외에 새로운 유인책을 추가 또는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특히 EU 집행부와 회원국 간의 권력 분립과 중층 의사결정 구조·경쟁친화적인 정책의 무차별적 적용이라는 프레임워크·환율조작의 어려움·역내에서 낮은 수준의 무역보호·FDI의 자유로운 이동·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의 유입이 손쉬운 점을 감안할 때, Wade 교수의 발표내용처럼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과 infra 구축지원에 대한 정책을 우선 고려할 필

요

□ 김인철 박사의 발표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김인철 박사의 발표자료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개관, 성장침체·소득격차 확대·일자리 창출 등 한국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요약 소개와 향후 산업정책차원에서 governance, 기업가정신, 금융발전 등에 대해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
- 향후 산업정책의 3대 핵심이슈가 어떻게 도출되었고 왜 이런 이슈들을 논의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도출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또한 이러한 Governance 등의 이슈가 과거 정부가 취한 방향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중진국의 trap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별첨 1 >

국제세미나 개최계획

I. 행사개요

- 행사명 : (국문)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영문) Rethinking Industrial Policy in the Era of Global Socio-Economic Restructuring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12. 13(화) 13: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추진체계
 - 주최 : 산업연구원
 - 후원 : 지식경제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한·영 동시통역)

II. 행사 배경 및 목적

-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사회환경의 변화가 미래 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산업정책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
 - 세계경제 불균형, 일부 국가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침체, 자원·에너지·환경문제, 달러화 문제,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국가간 경제사회 네트워크·협력 확산, 법제도 및 규제 변경, 신흥국(특히 중국)의 발전과 경쟁 등
 - 국내 경제사회적 불균형(제조업/서비스업, 수출/내수산업, 대 중소기업, 계층, 지역, 재정 등), 고용노동 문제, 일자리 창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녹색성장, 동반성장, 신성장부문 발굴 및 산업화 등
- 신산업정책의 전망, 바람직한 모습, 효과적 실행방식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 증대
 - 국내외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활동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산업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 국제세미나 개최 목적은 신산업정책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향후의 전망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III. 세션 구성 및 아젠다

□ Session I :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망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and its New Framework

본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펼쳐온 산업정책에 대한 배경이 되었던 경제이론, 정책수행 경험,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산업정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와 달리 세계경제의 변화과정과 함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은 산업정책의 정체성과 의의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침체 등 세계경제의 질적 변화에 따른 중진국의 산업정책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미래전망도 덧붙이고자 한다.

■ 참여자

구 분	No	참여자	직위	소속
사 회	1	김광두	교수	서강대 국가미래연구원장
발 표	1	Dani Rodrik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토 론	1	Robert H. Wade	교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
	2	Jacques Sapir	교수	프랑스 파리 고등사회과학원
	3	김준동	국장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4	장석인	소장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 Session II : 경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역할

- 중진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한계

The Role of New Industrial Policy in Avoiding Middle Income Trap

본 세션에서는 향후 중진국 입장에서 산업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국의 경험을 나누고 중진국 산업정책 수립에의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이 그 동안 추진했던 산업정책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중진국의 산업정책 수립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의 역사와 전략적 지향점을 짚어 본 후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참여자

구 분	No	참여자	직위	소속
사 회	1	이경태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발 표	1	Robert H. Wade	교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
	2	Jacques Sapir	교수	파리 고등사회과학원
	3	김인철	연구위원	KIET
토 론	1	이상호	교수	세종대
	2	이 근	교수	서울대
	3	신장섭	교수	싱가폴국립대
	4	이상진	국장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

IV.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비 고
13:00-13:30	○ 등 록	
13:30-14:00	○ 개 회 사: 산업연구원 원장	
	○ 축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제 I Session: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망		
14:00-15:20	○ 발표 1 : Dr. Dani Rodrik - 제목: 산업정책의 새로운 관점과 전망	○ 사 회: 김광두 교수
	○ 토 론 - 토론자 1: R. H. Wade 교수 - 토론자 2: J. Sapir 교수 - 토론자 3: 김준동 국장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 - 토론자 4: 장석인 소장 (산업연구원)	
15:20-15:35	○ 휴 식	
■ 제 II Session: 경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역할 - 중진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한계		
15:35-16:50	○ 발표 1: R. H. Wade 교수 - 제목: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산업정책: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사 회: 이경태 원장
	○ 발표 2: J. Sapir 교수 - 제목: 산업정책의 귀환: 최근 프랑스의 경험과 시사점	
	○ 발표 3: 김인철 박사 - 제목: 한국 산업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16:50-17:00	○ 휴 식	
17:00-17:50	○ 토 론 - 토론자 1: 이근 교수 (서울대 교수) - 토론자 2: 신장섭 교수(싱가폴국립대학) - 토론자 3: 이상호 교수 (세종대 교수) - 토론자 4: 이상진 국장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	
	○ 질 의 응 답 및 폐 회	
17:50-18:00	○ 질 의 응 답 및 폐 회	

V. 주요 발표자 프로필

1. Dani Rodrick

Dani Rodrick은 하버드 대학을 최우등(summa cum laude)으로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사회과학연구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가 제정한 앨버트 허시먼(Albert Hirschman) 상의 첫 번째 수상. 세계화와 국제경제, 경제개발 및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경제 정책'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정부'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몰두. 저서로는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세계화는 너무 멀리 간 것인가?(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새로운 세계 경제와 개발도상국(The New Global Economy and Developing Countries)』 등이 있음

2. Robert H. Wade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정치경제학 교수로, 영국 서섹스대, 미국 MIT 와 브라운대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기도 했다. 1979년 한국의 정부산하기관인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에서 현장활동을 하였으며, 그의 책 "시장의 통제"는 미국정치경제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책' 상을 받았으며, 2008년 '레온티에프상'(Leontief)상을 수상

3. Jacques Sapir

1954년 생, 경제학자,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 산업화양식 비교연구센터(CEMI-EHESS)소장, 1989년 전략 분야 연구서에 대한 카스텍 상 수상, 2001년 금융경제 연구서에 대한 튀르고 상 수상. 프랑스 정부, 기업 및 국제기구 동유럽 지원프로그램의 자문관으로 활동. 러시아 중앙은행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그룹 및 러시아 정부를 위한 working group에 참여